

【 9 】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1995. 1. 24.

발 의 자 : 이상원의원의외 2인

☐ 제안이유

국내여비규정이 '95. 12.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 12. 30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의원의 국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제4조 제2항)
-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3조 제1항)

양주군의회조례 제 호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회의수당) ①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p> <p>(단서신설)</p>	<p>제3조(회의수당) ① ----- ----- -----</p> <p>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4조 제2항 관련)

(단위 : 원)

지급 기준액 구 분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동차 운 입	현 지 교통비 (1인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500	37,500	25,000
의 원	2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500	18,000	18,000

비 고 :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현지활동및 여행 (국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公務員手當規程 改正理由

技術職公務員의 專門性強化를 위하여 國家技術資格證 所持者에 대한 加算金制度를 新設하고, 敎育公務員의 處遇改善을 위하여 擔任業務手當을 新設하며 기타 在外公務員에게 지급하는 在外勤務手當등 일부 手當의 지급액 및 지급대상을 裏實에 맞게 調整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1983년 1월 1일이후에 出生한 세제이후의 子女에 대한 家族手當 子女學費補助手當등의 支給制限規定은 人口억 제효과가 적으므로 廢止함(令 第10條第3項 第11條第2項 및 第12條第2項).
- 나. 技術業務手當의 지급대상자중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系資格證所持者에 대하여는 等級別로 月 20,000원 내지 月 50,000원의 加算金을 지급함(令 別表 11 第1號).
- 다. 軍人에 대한 技術業務手當을 階級別·勤務年數別로 並等支給하던 것을 階級에 관계없이 勤務年數別로 並等支給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月 8,000원 내지 月 25,000원에서 月 30,000원 내지 月 50,000원으로 引上調整함(令 別表 11 第1號).
- 라.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에 근무하는 敎員등에게 지급하는 敎職手當의 지급액을 月 17만원에서 月 19만원으로 引上하고,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에서 擔任業務를 담당하는 敎員에게 月 30,000원의 擔任業務手當을 지급함(令 別表 11 第2號).
- 마. 下士官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下士官에게 지급하는 軍人獎勵手當을 月 80,000원이하에서 月 150,000원 이하로 引上함(令 別表 11 第4號).
- 바. 在外公務員에게 지급하는 在外勤務手當을 각국의 物價上昇率을 감안하여 달리화지급국은 16퍼센트, 현지화지급국은 평균 2퍼센트 引上함(令 別表 11 第5號).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 수 성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김 기 재

◎대통령령 제14,857호

국내여비규정중개정령

국내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다.

제4장의 제목중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한다.

제18조 내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이전비의 지급대상) 이전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구임지(신규채용에 있어서는 채용당시의 거주지도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신임지도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안에서 부임하는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이전비의 지급) ①이전비는 별표 3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변경 및 이사화물 운송내역(이동구간·이동거리 및 운송비를 말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가족여비의 지급대상등) ①가족여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로서 부임할 때에 가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동반하거나 부임후에 가족을 불러가는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부임의 명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내에 구임지 또는 구임지외의 지역에서 신임지외의 지역으로 가족을 이전할 때에는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지급액)"을 "(가족여비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가족이전비"를 각각 "가족여비"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13201호

관

보

1995. 12. 29. (금요일)

거주지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근무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중 "가족이전비"를 각각 "가족여비"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그 가족을 신임지에 불러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는"을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족을 신임지에 불러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여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를 "가족여비"로 한다.

별표 1의 목호의 다호의 해당공무원란중 "서울특별시"를 삭제하고, 동표의 목호의 다호란 다음에 라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의 4. 중 "직할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을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으로,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으로 한다.

차관, 처의 차장, 특1급외고직공무원, 고등검사장, 검사장, 치안총감, 남오공과대학교, 여수수산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대학 및 개방대학의 총장, 대학의 부총장, 국립교육평가원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 1 호

1. 차관보, 1급공무원, 특2급외고직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제1호 가족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1호봉인 검사
3. 치안총감
4. 대학의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처장 기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대학교원봉급액란의 특3호봉 봉급을 받는 공무원, 교육부 교육정책실장 및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중앙교육연수원장인 장학관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5. 소장 준장

별표 2의 숙박료 및 식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실비	25,000
37,500	25,000
37,500	25,000
18,000	18,000
14,500	15,000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외여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급료란중 "동표 제1호 해당자(차관 및 처의 차장 제외)"를 "동표 목호의 라호 해당자(차관 및 처의 차장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로 한다.

별표 3의 급료란중 "동표 제1호 해당자(차관 및 처의 차장 제외)"를 "동표 목호의 라호 해당자(차관 및 처의 차장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로 한다.

[별표 3]

이전비정액표(제19조 관련)

(단위: 원)

이동거리	지급액	이동거리	지급액
50킬로미터까지	86,300	300킬로미터까지	186,200
100킬로미터까지	110,200	350킬로미터까지	207,800
150킬로미터까지	135,100	400킬로미터까지	229,200
200킬로미터까지	154,400	450킬로미터까지	250,000
250킬로미터까지	162,800	451킬로미터이상	268,300

비고 : 1. "이동거리"라 함은 주거지에서 신거주지까지의 육로에 의한 편도거리를 말한다.

2. 이동거리가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國內旅費規程 改正理由

公務員の 國內出張時 業務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宿泊料의 實費 支給대상을 확대하고, 宿泊料 및 食費의 支給單據를 現實化함과 아울러, 轉任公務員에게 지급하는 移轉費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기타 現行規定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補完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出張經費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宿泊料의 實費 支給 対象을 最高級이상으로 하던 것을 次官級이상으로 확대하고, 宿泊料 및 食費의 支給單價를 평균 53퍼센트 인상함(令 別表 2).

나. 協任公務員에게 지급하는 移動費를 職務 家族周幸 및 移動距離에 따라 差等支給하던 것을 앞으로는 移動距離만을 기준으로 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대폭 인상함(令 第19條 및 別表 3).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 수 석

국무위원 김 기 재

총무처장관

◎대통령령 제14,858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을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과 퇴직일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사실"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충당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중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법 제24조제2항 및 제5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중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 및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라고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여부

제21조제2항중 "증감되기 전달"을 각각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1조제1항 각호"를 "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금액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이에 가산할 이자를 및 환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환수금에 가산할 이자(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계산기간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금액액 : 법 및 이 항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

2. 이자율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세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로 한다.

3. 환수비용 : 금액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금액

제27조제1항제2호중 "공무상요일일시금" 다음에 "·제해부조금·사망조위금"을 삽입한다.

제3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대장등본

제40조의 제목 "(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를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중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는 자"를 각각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47조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42조중 "퇴직연금" 다음에 "·조기퇴직연금"을 삽입한다.

제43조제3항중 "군인" 앞에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앞에 "제임용후"를 각각 삽입한다.

제48조 단서중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던 자"를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로 한다.

제53조중 "법 제62조제3항 각호"를 "법 제62조제3항 각호의 1"로 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 수 성

국무위원 김 우 석
내무부장관

◎대통령령 제14,877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회의수당"을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공유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유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유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복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속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수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9조제4항중 "보사환경·가정복지·산업경제·문화관광·민방위 및 소방업무, 행정(2)부시장은 교통·도시계획·주택·도로"를 "보건사회·교통환경·지역경제·문화관광·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업무, 행정(2)부시장은 도시계획·도로·주택"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회의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 이내	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 범위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일 50,000원 이내	

◇地方自治法施行令 改正理由

지난 7월부터 第2期 地方議會가 出帆함에 따라 그동안 地方議會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地方議會議員의 원활한 議政活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道隔地나 島嶼地域에 거주하는 地方議會議員의 경우에는 地方議會의 회의출석시 交通費·宿泊費등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현행 議政活動費는 모든 地方議員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道隔地와 島嶼地域으로서 條例가 정하는 지역의 地方議員이 회의에 출석하여 宿泊하는 경우에는 道隔地會議出席費를 會議手當에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

나. 會議手當은 地方議會議員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公休日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休日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會議手當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第2項).

<법제처 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 수 성

국무위원 김 우 석
내무부장관

◎대통령령 제14,878호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지방자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전단중 "서울특별시와"를 각각 "특별시와"로 하고, 동항 후단중 "서울특별시"를 "특별시"로 한다.

제21조중 "완남봉보 또는 경유에"를 "완남봉보에"로, "공무원이"를 "공무원이,"로, "주소지"를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로, "공무원(주소와 영업장소가 상이할 때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를 "공무원이"로 하고, 동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